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4차 회의의 내용과 의미

서재진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영운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북한의 금년도 최고인민회의는 4월 11일 작년과 마찬가지로 하루만에 회의가 끝났다. 회의 의제는 최태복 의장의 개회사에 이어 박봉주 내각총리의 작년도 사업 평가와 금년도 사업계획 보고, 노두철 내각부총리의 작년도 예산 결산 및 금년도 예산 계획, 최태복 대의원의 과학기술발전 관련 결의서 낭독으로 모든 회의 일정이 종료되었다.

작년 최고인민회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참석, 당창건 60돌, 조국해방 60돌을 기념하는 의미를 가졌으나, 금년에는 최고지도자가 참석하지 않았다.

박봉주 총리가 제시한 북한 내각의 올해 주요 사업은 국방공업 발전, 농업생산의 결정적 증가, 과학기술 중시 노선 관철의 근본적 전환, 대외경제 협조사업 활발히 전개, 내각의 책임성과 역할 제고 등이다. 예산안은 관례대로 금년에도 예산 총액이 아닌 내역별 증액 비율(%)만 발표되었다.

올해 국가예산수입은 전년 대비 7.1% 증액 편성되었다. 북한은 이의 78.1%를 중앙예산에서, 21.9%를 지방예산에서 충당할 예정이다. 국가예산 수입 중에는 작년까지 없다가 올해 새로 편성된 부동산 사용료 수입 항목이 있다. 북한은 부동산 사용료 수입을 전년 대비 12%를 증액 편성해 놓고 있다.

국가예산지출과 관련 북한은 올해 작년대비 3.5%를 증액 편성, 이의 15.9%를 국방비로 책정해 놓고 있다. 인민경제비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정확한 편성비율을 밝히지 않는 대신, 그 속에 포함된 농업부문, 전력, 석탄, 금속공업과 철도운수, 과학기술발전 사업 부문 지출의 작년대비 증가율은 밝혀놓고 있다. 농업부문은 작년 대비 11.2%의 비교적 높은 증가율 제시함으로써 북한이 인민들의 먹는 문제, 식량문제 해결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금번 최고인민회의의 보고에서 북한이 과학기술발전을 중요한 경제전략으로 내세워 근본적인 전환을 일으켜 나갈 것을 천명해 놓고 있으나, 정작 과학기술사업을 위한 예산 지출은 농업(12.2%)이나, 전력, 석탄, 금속공업, 철도운수 부문(9.6%)의 증가에 훨씬 못 미치는 3.1%를 증액 편성해 놓고 있을 따름이다. 이는 북한이 비록 금년 국가예산에서 과학기술사업비 몫을 대폭 늘려 국가광역정보통신망을 구축하고, 우주기술과 핵기술, 해양과학발전의 토대를 쌓으며 과학부문의 인재양성, 연구개발, 첨단기술제품 생산기지 건설하여 강성대국 건설을 담보하려는 의지의 실현이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과학기술 분야의 거대한 계획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작년 최고인민회의에서 제시된 조직문제가 배제되는 데 따른 구색 맞추기 차원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가능케 한다. 사실 북한의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강조는 1960년대부터 줄기차게 이어지고 있다. 1970년대부터는 사상혁명, 문화혁명과 더불어 3대혁명으로서 기술혁명이 강조된 바 있으며, 1998년부터는 강성대국 건설의 3대기둥으로서 사상중시, 총대중시와 더불어 과학기술 중시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과학기술분야에서 의미있는 진전이나 경제부문에의 기여는 별로 없는 편이다.

금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남부 개방지역의 방문, 장성택 제1부부장의 답습 방문 등의 움직임과 관련, 개혁·개방 관련 새로운 조치가 예상되었으나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북한의 획기적 개방조치 제시에 대한 준비가 미흡함을 암시하는 한편, 핵문제와 위폐문제 등 당면한 문제 해결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최고인민회의에서 제시된 내용으로 비추어 볼 때 금년도 북한이 추진할 정책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당면한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 농업생산을 경제사업의 핵심과제로 추진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해 대비 12.2%를 증액한 예산 편성으로 가장 높은 예산 증가율이 이를 대변하고 있다.

둘째, 사회주의 경제원칙을 고수하는 가운데, 대외경제 부문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즉, 당면한 경제난을 해외부문을 통해 해결하기 위해 대외경제사업을 개선·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기지를 확충하고, 수출품종의 확대, 새로운 대외시장의 개척, 무역의 다양화와 다각화, 해외동포 상공인들과 다른 나라 기업들과의 합영·합작의 실현 등 대외경제협조사업을 활발히 전개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위폐문제에 따른 금융재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판단된다. 대내 경제와 관련하여서는 경제 관리면에서 사회주의 원칙과 실리보장의 원칙을 구현하면서 계획규율, 재정규율, 노동행정규율을 철저히 세워나가는 등 사회주의적 원칙에 맞는 경제관리를 추진해 나갈 것이다.

셋째, 북한이 국가예산수입에서 부동산사용료 수입의 증대를 언급하고 있는 바, 세수증대를 위해 주택이 암거래 되는 등의 관행을 양성화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등의 방식으로 부동산 부문에 대한 조치가 제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넷째, 경제사업과 정책이 내각의 권한 강화를 통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번 최고인민회의에서 북한은 내각을 나라의 “경제사령부”, 또한 “경제사령부로서의 내각”이라는 말을 여러 번 언급하면서 내각의 조직 집행자적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일 것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의 정책이 내각을 통해 경제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또한 경제논리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감지할 수 있게 하고 있다.